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재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많은 보유는 핵무장의 의혹을 초래할 수도 있다.

1개월 전 日本原子力産業會議의 모리 전무이사는 東京에서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와 만났을 때 『日本은 무엇 때문에 경제성도 없는 플루토늄에 집착하고 있느냐?』고 힐난을 받았다.

상대방은 미국 민주당에서 원자력통으로 알려진 학자이다. 모리 전무이사는 플루토늄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있다고 반론했으나, 미국이 日本의 플루토늄 이용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숨은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평화이용의 자세는 인정한다. 그러나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도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92년 11월 하순에 日本에서 개최된 핵확산금지에 관한 민간기구의 국제회의에서 아시아 어느 나라의 참가자로부터 이러한 질문이 있었다. 세계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을 앞세워 종래의 노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日本에 대하여 주변 국가에서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93년 1월에는 미국에서 클린턴 정권이 탄생한다. 그의 원자력정책은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플루토늄의 이용을 포기한 카터 정권처럼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핵확산금지문제로 日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정부관계자도 많다.

미국 새 정권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IAEA가 모색하고 있는 플

루토늄의 국제관리 구상에 日本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결백」을 세계에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 구상이 구체화되면 國內의 플루토늄 이용도 국제기구의 사찰이 필요하는 등 까다로운 작업과 수속이 예상되고 있다.

### 未完成의 靑寫眞

日本에서는 고속증식로의 개발계획을 대폭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原子力委員會 專門部會 멤버의 한 사람은 『증식을 목적으로 한 원자로는 개발 베이스를 늦추어도 좋지 않은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의 고속증식로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플루토늄의 소비를 목적

으로 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식기술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부족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본격적인 실용화를 추진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많다. 日本原子力發電(株)의 연구개발본부장은 『계획이 크게 늦추어지면, 어렵게 축적한 기술을 계승할 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축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로부터 해상수송하고 있는 플루토늄이 1월 5일쯤에는 이바라기겐의 東海港에 들어온다. 플루토늄의 대량이용시대를 한 걸음 내딛는 것과는 반대로 장래의 플루토늄 이용을 위한 日本의 청사진은 아직 그려지지 못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92년 12월 29日 朝刊)■

## 에너지危機 맞은 東歐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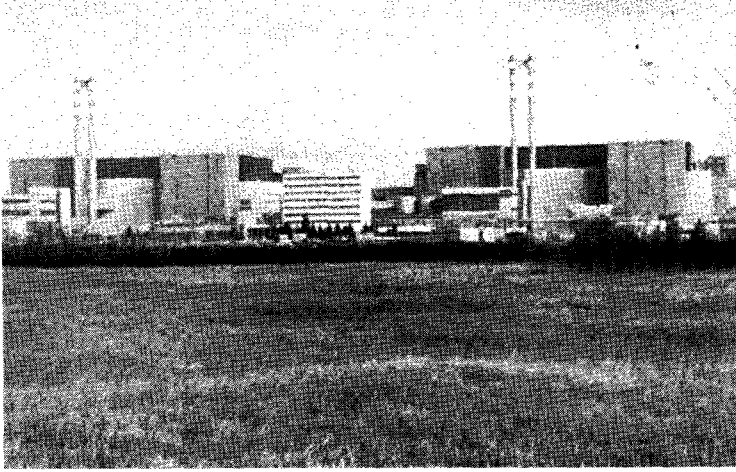
**東**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옛 소련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옛 소련의 석유생산이 순조롭지 못한데다가 석유, 천연가스, 전력수송의 길목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립관계가 계속되어 장래의 에너지安保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 公共서비스에도 危機

일찍이 옛 소련으로부터 東유럽

(옛 동독 제외)에 日當 1백60만배럴을 수출하고 있던 석유수출이 91년에는 약 50만배럴까지 격감했으며, 이러한 상태는 92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東유럽 중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는 외화가 꺾박하고 있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두 나라이다. 東유럽과 옛 소련 사이의 무역이 원칙적으로 교환가능한 통화決済로 바뀐 결과, 루마니아에서는 91년 1월을 마지막으로 옛 소련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은 중



단되고 말았다.

불가리아에서는 석유의 비축이 바닥나서 앞으로 2, 3개월이면 각지의 난방이나 온수공급 등의 공공 서비스가 중단될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에서는 옛 소련으로부터 아직도 상당한 수량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으로 中東유럽에 석유를 수출하는 것이 코스트가 많이 먹히는 해상수송으로 다른 시장에 수출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높다는 사정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정부는 사태를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89년 이래 4년 연속하여 대폭적인 생산활동의 후퇴로 內需가 감소한 결과 겨우 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석유보다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옛 소련으로부터의 천연가스의 수입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2년 가을에는 러시아의 對西유럽 가스수출이 한 때 단기간이나마 중단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배경에는 파이프라인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와 러

시아 사이의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던 것이다.

### 備蓄擴大에도 限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립은 뿌리가 깊다.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 中東유럽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불안정한 정세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1. 국내자원의 재개발 2. 비축의 증강, 3. 조달대상의 다원화 등이다.

원래 產油國이었던 루마니아는 올해부터 유럽과 미국의 유력한 석유회사에 鑛區를 개방하여 석유의 재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자원개발이 성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헝가리는 석유의 비축체도를 확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로운 비축시설의 건설과 비축용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精油시설이 옛 소련의 특정한 油種을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조달 대상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최근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가스 供給網의 정비이다. 체코에서는 인접한 독일과의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의 가스회사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알제리의 LNG를 수입, 크로아티아의 리예카 앞바다에 있는 크루커드섬을 기지로 만들어 각국에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공동체(EC) 여러 나라로 앞으로 알제리에 대한 가스의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이며, 이를 노려서 東유럽과 EC 여러 나라의 가스공급망을 최종적으로 연결하려는 발상은 장차 東유럽의 에너지 안정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西方側과 電力融通을 推進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은 전력 부문에서도 코메콘시대 이래의 東유럽의 송전망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이미 결정한 바 있다. 이들 국가는 93년부터 5년간을 목표로 오스트리아, 독일 등과 전력의 상호유통을 위한 작업을 진행시켜, 98년 이후부터는 동서간의 전력망 구성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東유럽 국가들은 서방측과의 에너지협력이 긴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추진에는 그의 전제조건으로서 에너지가 격 격차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나라는 국내의 정치적인 저항으로 늦어지고 있는 에너지가격을 서방측 수준까지 조속한 인상을 실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日本經濟新聞 92年 12月18日 朝刊) [ ]